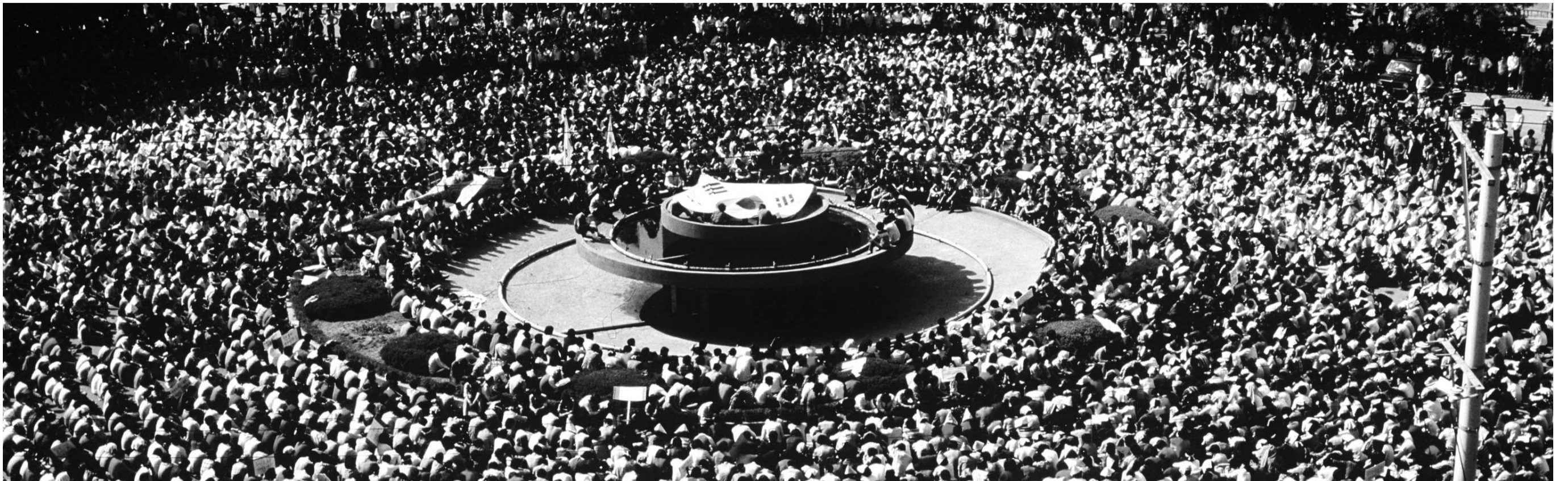


‘불혹의 5·18’ 역사를 넘어 시대를 넘어 대동세상으로



1980년 5월 16일 광주지역 대학 교수와 학생, 시민 등 3만 여명이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모여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던 ‘민주화대성회 집회’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5·18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성역(聖域)’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5·18은 40년 동안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었다. 긴 세월동안 왜곡과 폄훼로 오월 정신은 끊임없이 짓밟혔고, 영욕의 세월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진실의 힘은 위대했다. 끊임없는 외부의 공격과 왜곡에도 5·18은 굳건히 버텼다.

뿌리 깊은 5·18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역사 속 사건이 아닌 미래에 전승될 정신으로 말이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5·18은 40주년을 맞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다.

5·18을 겪지 않는 세대에게 5·18의 역사와 과제를 보여주고 계승해야 하지만 각종 기념행사가 취소·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5·18의 정신은 지금껏 그래 왔듯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꽃을 더욱 활짝 피울 것이다.

5·18을 해결하기 위한 5가지 원칙(진실·책임·배상·명예·기억)이 지난 1994년 제시됐다. 40주년 5·18을 맞은 올해 이 원칙들을 다시금 되새겨보자.

◇진실, 책임, 배상, 명예, 기억=40년의 세월동안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돼 왔다.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약칭 국회청문회), 1995년 김영삼 정권 시절 12·12 및 5·18 사건 서울지법검찰청 수사과 국방부감찰부 수사(약칭 검찰조사),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약칭 과거사위원회),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약칭 국방부 특조위) 등을 통해 5월의 진실을 밝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꽃피운 ‘성역’에서 왜곡과 폄훼 시달린 영욕의 세월 헬기사격·발포명령·암매장 등 진실 밝히기 노력은 지금도 계속 코로나19로 40주년 행사 대폭 축소 온라인 행사로 오월정신 확산

고 시도했다. 진실은 법률적 인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역사적 진실이 된다. 한국 사회 일부에서는 아직도 5월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사회적 인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5·18의 진실은 내용상 발포명령, 헬기사격, 행방 불명자와 암매장여부 등 중요한 문제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미완성이다. 진실이 미완성임에 ‘책임’ 또한 해결될 수가 없었다.

5·18의 책임의 범위조차 한정되지 못했다. 최고 책임자, 신군부 주요 지도자, 현장 지휘자 등의 책임자들은 있지만 당시의 지휘체계조차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지난 1997년 전두환의 사법적 처벌이 있었지만, 이는 12·12사건 등의 처벌이 5·18당시의 책임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 진술한 사과는거녕 진실에 대한 인정조차 없었다는 점 등은 책임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상’ 또한 마찬가지다. 1988년 5·18 보상정책의 실행 이후 일부 금전적 배상은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피해보상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도 5·18 유



1980년 5월 18일 밤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이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공자와 유가족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진정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미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40년의 세월 동안 5·18을 지칭하는 말도 수시로 변했다. ‘광주사태’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어가 회복되는 듯 보였다.

5·18 묘지는 국립묘지로 지정됐고 5·18은 국가 기념일로 승격됐다. 하지만 이러한 명예회복은 불안정했다. 진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폄훼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5·18 유공자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도 이뤄지고 있고, 40주년인 올해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5·18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권의 발로였고, 한

국 민주주의의 원천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억은 바로 미래세대에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망각에서 기억으로 발돋움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5·18은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웠다. 이제야 비로소 기억을 논의하고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방식을 찾고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5·18이 박제화된 행사로 남지 않고 영원한 정신으로 계승돼야 할 시점인 올해, 코로나19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40주년을 기념하고 오월 정신을 밝힐 각종 5·18 기념식이 대폭 축소·축소됐기 때문이다.

5·18의 꽃이라 불리던 전야제를 비롯해 대중들이 모이는 국민대회, 청년마당은 취소돼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반면 5·18을 추모하는 추모제와 기억하는 부활제는 축소해 열리게 된다. 옛 전남도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던 5·18 정부 기념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5·18 40주년 기념식은 의례적인 이벤트가 아닌 5·18이 100년을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됐다.

하지만 ‘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5·18행사위)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 삼아 1980년 당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적 투쟁이었던 5·18의 절대 공동체 정신을 더 널리 퍼져 나가게 할 방침이다.

비대면 온라인 행사들을 대폭 확대해 젊은세대들을 주축으로 5·18의 정신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사위는 유튜브 등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 콘테스트나 공모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5·18의 정식 주제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인만의 해석과 방법으로 부르는 공모전을 갖고, 개인이 자기들의 공간에서 인증샷으로 5·18을 기념하는 방법들을 온라인에서 퍼지게 해 오월 정신을 퍼뜨릴 것이다.

또 오프라인에서도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추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 안전한 추모분위기도 이어갈 예정이다.

상무관에는 5·18을 추모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개인적으로 추모하는 방식을 마련할 것이다. 또 국립5·18민주묘지와 구묘지에는 현화할 수 있는 꽃을 비치해 개별적 추모를 지원한다.

조진태 5·18행사위 집행위원장은 “40주년을 맞은 5·18이 부득이하게 축소됐지만 오월정신은 더 크게 피어날 것”이라며 “대동 세상을 구현한 오월정신이 퍼져 나가 코로나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기관



울타리

울타리는 그 안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꾸어갑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어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사 사설을 안전 관리는 물론, 공익적 기술 지원으로 국민안전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능력 향상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재해예측시스템' 운영으로 능동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안전관리컨설팅', '안전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깨끗한 농어촌 용수 공급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농어촌의 고유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